

I

추진 배경

- ☐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 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‘수산업혁신 2030 계획’ 발표(‘ 19.2)
- ☐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용자 제한 강화추진

II

주요 개정내용

- ☐ 불법어업 시 용자제한 기간 확대(안 제6조 관련)
 - 현재불법어업 시 최대 2년까지 수산정책자금 용자를 제한하고 있으나, 이를 5년으로 확대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 강화
- * 농업정책자금의 경우 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’에 따라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현재에도 최대 5년까지 용자를 제한하고 있음

III

향후 추진일정

- 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: ‘ 19.12 ~ ’ 20.1
- ☐ 규제 및 법제심사: ‘ 20.2
- ☐ 국회 제출: ‘ 20.3